

헌재, 김용현 등 탄핵심판 중인 채택

변론 3회 추가 내달 13일까지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고위직 관계자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기일지정이 너무 촉박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현재 '체포 상태'인 윤 대통령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불출석하더라도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헌재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됐다. 앞서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홍창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광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경 고위직 등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국회 측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국회 측 신청 증인 5명에 더해 김 전 장관 등 총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김 전 장관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마땅하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임을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에 대해선 추후 채택 여부를 밝혀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월23일 진행될 4차 변론부터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월23일 광 사령관과 조 청장, 2월4일 이 사령관과 여 사령관, 홍 전 차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아울러 2월 6일 변론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계획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먼저 이뤄지

거나 적어도 다른 증인들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향후 평의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기존 5차까지 지정되어 있던 변론기일에 더해 2월6일, 11일, 13일 등 세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또 5차 변론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기일 지정에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어제 체포된 상황에서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를 간격으로 충실히 변론하기 힘들다"며 "대리인들도 로봇이 아닌데 어떻게 준비

하고 와서 변론을 하겠느냐"고 호소했다. 또 "실질적으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아무리 형사재판이 아니라지만 피청구인에게도 인권이 있다. (형사사건) 피고인에 대한 재판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부 평의를 거쳤고 평의를 거친 근거는 전례, 그리고 2월6일부터 하루 종일 진행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 (지정된 변론기일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뉴스시스

군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설 명절 장보기 행사 진행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71회 임시회의를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간의 일정으로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는 현장방문,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또한 군산시의회 의원 징계 관련하여 환경보 의원은 출석정지 30일, 서동완 의원은 출석정지 3일로 확정됐다. 김우민 의장은 이날 폐회를 마무리 하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이겨내야 한다며 군산시의회의는 시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를 마친 군산시의회의는 이날 오후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진안군의회 임시회 개최 새해 첫 의사일정 돌입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 29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제안한 이부라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진안군 민생안정 지원금 조례안' 등 6개 안건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17일부터 21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동창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군민의 곁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활안전과 편익,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정부 일방적 벼 재배면적 감축 철회하라”

임승식 전북자치도의원 “식량주권 확보 위해 적정 수준 벼 재배면적 확보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임 의원의 주장은 정부가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8만ha를 감축하기로 하고 각 시도별 쌀 생산량 기준 배분면적을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전체 벼 재배면적(10만 4,348ha)의 15.2%에 해당하는 1만 2,163ha를 전락작물·경관작물 등 타작물로 전환하거나 친환경인증 전환, 휴경 등으로 감축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는 미행 농가에 대해 공공비축미 배정을 제외하고 목표 미 달성 시·도는 공공비축 배정물량을 감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임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농민들의 영농권 침해는 물론이고 경작 자율권과 작물 선택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임 의원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8만ha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은 40만톤으로 정부가 매년 수입하는 쌀발용 쌀 40만 8천톤과 비슷한 수준이다"며, "쌀을 수입하면서 오히려 쌀 과잉공급의 원인을 농민들 탓을 하고 있으며 수입용 쌀을 그대로 두고 재배면적만 감축해서는 쌀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임 의원은 "국내 벼 재배면적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2014년

81만5,506ha에서 지난해 69만7,714ha로 11년 동안 매년 평균 1만700ha이상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근시안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실시할 게 아니라, 최소한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으로 전 세계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농민의 영농권을 제한하며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임승식 의원은 "벼 재배면적 감축은 국내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중심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137년전 설립된 수청공소, 역사적 가치에도 노후화로 방치”

권요안 전북자치도의원, 완주 수청공소 문화유산 지정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완주군 운주면에 위치한 천주교 전주교구 고산성당 소속 수청공소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권요안 의원을 비롯해 전북자치도 문화유산관리과장, 완주군 문화유산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청공소 관계자가 참석했다. 권 의원은 “수청공소는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인 1888년에 설립된 순교선조들이 남겨준 유산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청공소 관계자는 “고산 지역 내 천주교 유적을 연구·정리하여 문화유산을 지정할 수 있도록



록 준비하고, 교구 자체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주군 문화유산과장은 "수청공소를 기념물(터) 또는 등록문화유산(건축물)로 지정하기 위한 방향 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수청공소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열어 공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유산관리과장은 "문화유

산 지정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여러 문화유산위원들의 자문을 충분히 받고 이후 학술대회를 통해 수청공소의 역사적 가치, 건축적 가치, 지정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요안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청공소의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의견이 모아진 만큼 이후 학술대회를 통해 수청공소의 보존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888년에 설립된 수청 공소는 병인박해 이후 숨어 들어오는 신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 곳으로 1927년에 현 건축물이 완공되었고, 1958년 고산 본당 소속 공소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그 기능을 이어오고 있다. /이만호 기자

“尹 즉각 구속, 익산 7공수 진상 규명”

도내 시민단체 성명 발표

전북 지역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구속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지난해 3월 있었다고 알려진 익산 제7공수특전여단의 움직임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각적인 구속을 통해 12·3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대는 "어제(15일)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체포됐다. 내란 사태가 장기화된 것을 돌아보면 너무 늦었지만, 물리적 충돌 없이 체포된 것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그 앞으로 수사에 응할 것이라 예측하는 시민은 없다. 민주공화국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윤석열은 즉각 구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전북 익산시에 주둔 중인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공수특전여단의 이례적인 공기관, 교정시설 방문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5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을 통해 지난해 3월 익산에 주둔 중인 제7공수여단이 한국은행과 KBS전주방송총국, 전주·정읍·군산교도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에 저항하는 시민들은 포고령

위반 명목으로 구금하기 위한 수용시설 점검이 아니냐"며 제7공수여단의 시설 방문이 비상계엄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연대는 "어제(15일) 언론을 통해 제7공수여단이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 가량 한국은행 전북본부, KBS 전주방송총국 및 예하 송신소, 전주·정읍·군산교도소 등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10년간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란 점에서 의혹의 대상이며, 앞서 광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제7공수여단 병력에게 출동 대기를 지시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민들은 민주화운동의 역사 속 시민들을 확실한 전북 주둔 군부대가 또 다시 내란과 연관된 것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바라고 있다"며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이 제7공수여단 등을 비롯한 군부대를 동원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 사태처럼 군인의 총부리가 시민들과 한정질서를 향하는 일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오직 윤석열의 즉각 구속 및 퇴진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시스

청년농 지역 정착 도와 지방소멸 완화

민주 박희승 의원, '청년농 농지우선공급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후 양도한 상숙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비농업인 소유 상숙농지 매입을 확대하고, 해당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활성화 및 청년농 농지 우선 공급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상속받은 농지를 8년 이상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賃)한 후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임대기간에 비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양도받은 상숙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990년 약 666만명에 달했던 농가인구는 2023년 209만명으로 급격히 감소



했다. 더욱이 청년층 등의 유출로 농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2023년 기준,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2.6%에 달하는 등 지속 가능한 영농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5년 전체 경지면적 중 비농업인이 소유한 경지면적 비율은 약 33%였으나, 2015년 경우 43.7%에 달한다. 이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역행하는 추세다. 또 매년 발생하는 상숙농지 중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되거나 매도되는 상숙농지의 비율도 매년 10% 내외로 낮다. 박희승 의원은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으나, 농지를 상속받아도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자경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청년농의 경우 자본이나 농지거래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기존 소유자와의 유대 형성 미흡 등으로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 농지의 세분화를 막아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동시에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농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지방소멸을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상관면 지방도 721호선 개선 주문

윤수봉 전북자치도의원, 주민 애로 현장 확인·점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의화운영위원장, 완주1)은 16일 상관면 지방도 721호선 개선 민원 현장을 확인·점검했다고 밝혔다. 윤수봉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도로 두 곳(405-3, 293-3)의 가파른 선형 및 표지판 문구 개선 사항을 확인·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점검 결과 상관면 마치리 용신마을과 마수대 마을 두 곳 모두 지방도 회전반경 부족으로 사고 위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관련 부서에 신속한 개선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도내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교차로를 이용하는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상당한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도로 및 교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선형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